

## 동해시, 2025년 교육발전

### 특구 성과보고회 성료

동해시는 12월 19일 동해시청 본관 2층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환경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동해시장을 비롯해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과 부모, 교사, 대학 교수,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력의장을 이뤘다. 보고회에서는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와 2026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참여한 학생 대표 2명이 소감을 발표하며, 사업 참여 경험과 향후 시에 바라는 점 등을 공유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학생 눈높이에 맞춘 사업 흥보, 다양한 분야의 진로 체험 기회 확대, 등하굣길 안전 환경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 분석과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업 운영을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 횡성군,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 관리 분석·진단평가 '최우수' 평가

횡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평가를 이뤘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입증받았음과 동시에,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전국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 ▲재산 활용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공정성을 위해 9개의 본지표와 3개의 가점지표 등 총 12개 항목을 적용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졌다.

## 김진태 지사, 4개 특별자치시도 대표회장 취임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모여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공동성명 채택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23일(화) 코트아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2026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대되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국 3특이라 불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연대해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한 오후에 개최된 지방분권 실현 포럼 환영사를 하며 강원특별법이 왜 심사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하며,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가장 큰 이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이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는 강원특

별법, 전북특별법, 제주특별법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동 발표되었다.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1월 말부터 언론 기고, 시군 의회 촉구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각 특별자치시도는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입법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는 청렴도가 도정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1년간 추진해 온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 덕분에 노력도 부분에서 지난 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자치권 확보 방안 논의



원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

지방분권 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4개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슬로건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 김종석 위원이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와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이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을, 경기대학교 박현우 교수가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 및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 지위 확보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원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 평창올림픽플라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유산인 평창올림픽플라자와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12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평창올림픽 플라자 2층 레지던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창올림픽플라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관광, 문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후 활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찬섭 평창유산재단 사무처장은 “평창올림픽플라자는 올림픽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실효성이 있는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사업'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약 9만 평이 제기된 대명지와 영랑호아파트 인근 영랑호 입구의 우수토실 토사 등의 유입을 개선하고, 통천군 순국동지 충훈비 일원 호안 침식을 완화하는 한편 시생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속초시는 퇴적물 저감과 수리·수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갈대와 부들 등 자생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 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침식된 흙은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조류와 수생생물을 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흰뺨검둥오리와 쇠백로 등을 생태 지표종으로 설정해 맥이 망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기존 공원 동선과 이용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저

김민석 기자

##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홍천군은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SOC사업자인 홍천군 최대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기획재정부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용문여의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2.7km, 총사업비 1조 995억 원의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이달 16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 확정됐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용문여의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2.7km, 총사업비 1조 995억 원의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이달 16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 확정됐다. 이로써, 서울의 3배,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로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던 홍천군에도 철도망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예타조사 통과한 수도권 연

결 광역철도는 홍천군에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버스로 45분 걸리는 양평군 용문까지는 24분, 청량리역까지는 1시간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시성, 안전성, 경제성이 높은 철도만의 교통 서비스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결하여 인구유입, 생활인구 등 유동 인구를 확장시켜 지역소멸을 막고 기업유치 촉진,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강원 영서 내륙의 홍천군을 수도권 배후도시로 도약케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이연식 의장



고영한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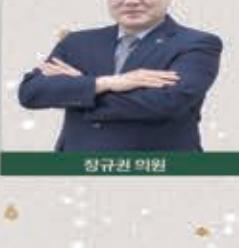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장승기 의원



정규권 의원



장재동 의원



임새별 의원



윤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2025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